

담양 관방제림 푸조나무, 고사 우려

천연기념물 제366호...북쪽제방 따라 2km에 조성된 풍치림 추위 약한 남부수종, 동해 탕 2~3주 지연...담양군 실태조사



관방제림(2018년 5월 대나무축제 당시)

천연기념물 제366호인 전남 담양 관방제림의 수령 300여년 아름드리 푸조나무 100여그루가 5월 중순이 지나도록 잎을 피우지 못해 관리당국이 긴급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고민에 빠졌다.

10일 담양군에 따르면 관방제림의 대표 수

종 가운데 하나인 푸조나무 100여그루 중 상당수가 생육이 늦어지면서 고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방제림은 담양천 북쪽제방을 따라 2km에 걸쳐 조성된 풍치림이다. 푸조나무 103그루, 느티나무 38그루, 팽나무 9그루, 빛나무 7그루

를 비롯해 은단풍, 상수리, 곰이말채나무까지 모두 7개 수종 177그루의 천연기념물 노거수가 식재돼 있다.

이 가운데 추위에 약한 남부수종인 푸조나무가 지난해 혹한기를 거치면서 동해 피해를 입어 개엽 시기가 평년보다 2~3주 가량 늦어지면서 관리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국공장 인근 푸조나무 10여그루의 경우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등 상태가 심각하다. 추위에 강한 느티나무가 평년보다 2주 가량 먼저 싹을 틔운 것과 대조적이다.

군은 산림청 지정 나무병원에 의뢰해 정확한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꽃이 피는 시기가 늦어지는 원인 등을 파악 중이다.

주민들은 "5월 중순인데 푸조나무에 이토록 잎이 나지 않은 것은 처음"이라며 "이러다 고사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보통 5월 중순이면 연한 초록색 잎을 보였는데 올해는 지난 겨울 추위 여파 등으로 개엽이 늦어지고 있다"며 "다만, 눈이 살아 있는 등 잎이 날 가능성은 높아 현재로서는 영양제를 주입하는 등 발육 촉진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최대 1000만원' 포괄적 보상 실시한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중증환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을 실시한다.

그간 인과성이 증명된 환자에 대해서만 보상을 실시해왔는데, 백신 불안감을 낮추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은 환자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최종적으로 인과성이 없다는 판정이 나오더라도 지원된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사업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된다. 추후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정 청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분기별로 한번 운영했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원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중대본은 필요 예산은 국고를 통해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인과성 증명 못한 중증환자 대상

현재 대상 5명, 국고로 예산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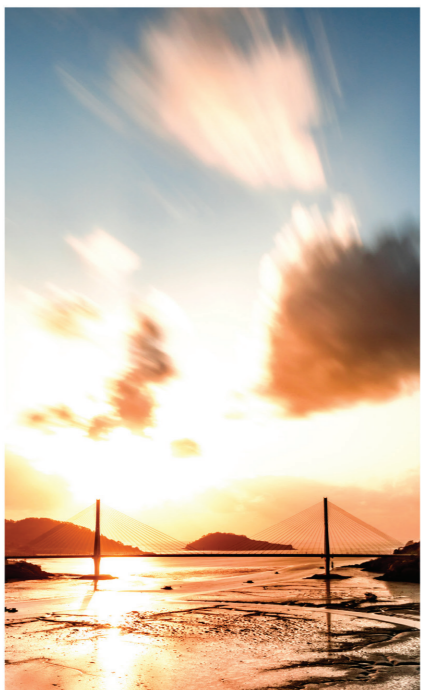
17일부터 시행...소급 적용 가능

죽은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나 '명백하게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중대본은 현재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 대상자가 5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과거 심의 사례 중에서도 추가 해당자가 있는지 재분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되면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진료비를 지원한다.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와



“ 두근두근 낭만여행 힐링영광 ”



이용섭 시장 “5·18 지방공휴일, 동참해 달라”

“단순 쉬는 날 아닌 오월 정신 되새기고 추모하는 날...민간 확산 되길”

이용섭 광주시장이 5·18 지방공휴일과 관련해 “단순한 쉬는 날이 아닌 오월 정신을 되새기고 추모하는 날”이라며 각계 동참을 호소했다.

이 시장은 10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시는 지난 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조례를 제정, 전국 최초로 5월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다”며 “일상의 업무를 잠시 멈추고, 80년 오월의 아픔을 되새기고 5·18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자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1년에 단 한 번, 5월18일 만큼은 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5·18을 기념하

고 정의로운 광주의 역사를 체현하자는 취지”라며 “가족, 지인과 함께 5·18 사적지를 돌아보고, 오월정신을 담은 다양한 전시, 공연, 영화를 관람하는 뜻 깊은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5개 자치구에서도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 5·18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했고, 올해는 광주MBC 등에서도 동참하기로 했다”며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5월18일 휴무가 관내 공공기관과 학교, 기관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기업 등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산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 자치경찰위 출범...위원장 김태봉·상임위원 오윤수

광주지역 자치경찰제의 컨트롤타워인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가 10일 출범식과 현판 제막식에 이어 첫 회의를 갖는 등 공식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시청 12층 사무국에서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이용섭 시장은 “광주형 자치경찰제가 성공리에 정착되기 위해선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행착오나 의견차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판단의 중심을 시민안전과 행복에 두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직을 운

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상임위원 선출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상근직으로 사무국장을 겸하는 상임위원에는 오윤수 전 광주경찰청 보안과장이 선출됐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을 공식출범 전날인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광주경찰청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최은희기자